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심사 보고서

1992년 5월 9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과정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 4. 25, 남구청장

나. 회부 일자 : 1992. 4. 30

다. 상정 일자 : 제12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년 5월 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영환)

가. 제안 이유

0. 우리구 관내 일명 "수영하천부지"의 주민 64세대가 현재 주민등록은 남구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된 상태로 남구에 주 생활권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수영강 남구쪽변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이 해운대구 제송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91.4.23. 10.15 2차례 해운대구청장에게 수영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위 지역이 우리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92.4.7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해운대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의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이지역 51,788㎡을 우리구로 편입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수영하천부지 하천중 아래4필지 51,788㎡를 남구로 편입시키고자 함.

□ 남구 편입예정 토지 현황

- 해운대구 재송동 1005-94 (가변지) -- --- 7,412 ㎡(지목:천)
- 해운대구 재송동 1005-95 (가변지) ----- 2,070 ㎡(지목:천)
- 해운대구 재송동 1005-96 (가변지) ----- 10,771 ㎡(지목:천)
- 해운대구 재송동 745-2 ----- 31,435 ㎡(지목:천)

0. 해당지역 현황

□ 지목별 조서

지 목 별	필 지 수	지 적	비 고
계	4	51,788 ㎡	
하 천	4	51,788 ㎡	

□ 필지별 조서

구 역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계	4	천	51,788	
해운대구 재송동	100-94 (가변지)	천	7,512	남구당덕동편입
"	100-95 (가변지)	"	2,070	남구수영동편입
"	1005-96 (가변지)	"	10,771	"
"	745-2	"	31,435	"

□ 세대및 인구 현황

- 세 대 : 64세대
- 인 구 : 222명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어무상)

0. 구간 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관내인 수영강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64세대가 주민등록은 남구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된 상태로 남구에 주생활권을 두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수영강 남구쪽변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이 해운대구 제송동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에게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해운대구 제송동에서 남구 망미, 수영동으로 편입토록 하자는 것임.
0. 하천을 경계로 구간의 경계를 정할 경우에는 관례상 하천의 중간을 경계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하천경계는 수영강의 남구쪽강 끝으로 되어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마땅히 강 중간을 경계로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0. 현재 64세대 주민의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오래전에는 강이었으나 상당한 세월동안 자연적인 현상및 홍수에 의하여 토사가 모여 삼각주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지역 주민의 주생활권은 강변에 위치한 해운대구 제송동 지역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육지로 연결된 남구 수영, 망미동 지역이므로 동일 생활권언에도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므로 주민 모두가 남구로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변경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92.4.7일 해운대구청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해운대구의회와 동의를 득하여 우리구에 통보

해움에 따라 우리구에서 상정된 안건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므로서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0.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남구, 해운대구청에서는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인근 지역인 사유지이며, 어린이 놀이터의 주변에 약20년동안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왕 조차 파악도 안되고 있던중 91년 3월 해지역 거주 주민들이 이후 해지역의 연고 권을 주장하기 위해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니 점용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자 남구청및 해운대구청에서 행정구역상의 문제점을 발견 되늦게 조정 하게 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음.
0. 이후 이런 사 례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행정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총무과장 이영환	'편입대상지역 주민의 편입으로 인한 호우피해등 재해대책 '우리 의회에서 동의단 해 주면 경계조정이 결정이 되는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수해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구에서 적극 지원하고 구제 하고 있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배종환 위원	"	'구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는 데도 20년간 방치한 이유는? '편입대상지역이 모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동사무소 에서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처리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20여년간 등재되어 있는 상태임. '해지역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어머 거주하고 있어 단기기간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하천부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하면 보상후 이주대책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됨.
이철형 위원	"	'편입대상지역이 국유지인데 사용료 부과는 어디서 했는지	'남구에서 부과했는데 엄격히 따져 보면 남구청장의 권한 행위가 아님.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태훈 위원	총무과장 이영환	'우리 구역으로 편입 대상지중 성토되어 있는 3필지에 대한 면적?	'1005-95필지 면적은 나와 있는 데 745-2및 1005-95는 일부만 땅으로 형성되어 있어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고 우리구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 지적측량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 경과

" 원안 가결 "

(표결 결과 : 재석위원 9명중 5명 찬성)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